

# 濟州 牛島의 教育

— 解放 以後 —

梁 鎮 健\*

## 1

본고<sup>1)</sup>는 해방 이후 牛島의 教育문화를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지답사가 이루어 졌으며 주민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더불어 문헌 검토가 병행되었다. 인류학적 방법론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본고는 온전한 문화기술지(ethnography)로서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교육사적인 측면에서도 그 논의에 허점이 많다.

그러나 우도답사에서 만나게 된 수많은 교육의 흔적을 교육의 역사로 확인하는 일은 기존 문헌고증의 교육사 연구와는 다른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본고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본고 역시 여러가지 삶의 표현들을 교육이라는 관점 아래서(sub specie educationis)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소실되어 가는 마을의 교육 역사를 복원하여 궁극적으로 제대로 정리된 濟州教育通史를 구축하기 위함도 있지만 특히 우도

\* 제주대학교 교직과 교수

- 1) 본고의 대부분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이 사항을 제외하고는 脚註를 달지 않는다. 면담자들의 인적사항도 본고에서는 일단 밝히지 않기로 하였다. 현지답사는 93년 5월, 8월 두 차례 있었고 전화를 이용한 면담이 수시로 진행되었다. 본고는 원래 우도의 마을지를 위해 쓰여진 것인데 그 원고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보충하여 한편의 논문으로 완성하였다. 해방이전의 우도교육 양태에 대해서는 김찬흠 선생님 집필로 우도의 마을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면담에 응해 주신 우도 주민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의 경우는 교육에 관한한 그 구조나 규모에 있어서 또 다른 특수성을 내비치고 있어 어떠한 모양새로든 교육의 역사를 정리해 둬야 시급한 과제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리가 선행될 때 비로소 제주도 전체의 교육역사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교육의 역사 또한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scher zirkel)이라는 법칙성 아래서 온전하게 재구될 것이다.

## 2

일제 36년의 질곡에서의 해방을 맞은 우도의 경우 제주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적 여건 때문에 여타의 초등학교 설립운동<sup>2)</sup>은 없었다. 그렇다고 우도의 초등교육 양태가 비생산적이었다는 뜻은 아니며 다만 초등교육기관 하나가 해방 이전부터 있었고 지역의 협소성으로 그 이상의 초등교육기관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해방 직후 진행되었던 제주도의 각종 학교설립운동과 같은 맥락의 교육운동은 없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우도의 초등교육 운동은 기존의 연평국민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시대적 교육요구에 응하였다. 연평국민학교의 모태는 영명의숙이며 영명의숙이 사립연평보통학교로 편제가 개편되고 다시 1938년에 사립연평심상소학교로 개편되어 운영되다가 해방과 더불어 연평공립국민학교로 그리고 1950년 6월1일 정식으로 연평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sup>3)</sup>

영명의숙의 정확한 설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는데 1918년이라는 기록과 1929년이라는 기록이 혼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평국민학교의 개교 연대에 대한 기록도 확실한 것이 없다. 다만 사립연평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알려져 있는 高泰柱의 이력<sup>4)</sup>을 참고해 볼 때 그가 1917년 4월 1일부터 1923년 3월 25일

- 
- 2) 양진진, 「교육행정사」, 제주문화, 1991, pp.302~306.  
양진진, 「일제하 제주도 초등학교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집, 제주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소, 1992. 12, pp.31~52.
  - 3) 제주도교육청, 「도교육연혁지」, 참조.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교육통사」, 참조.
  - 4) 고태주 이력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여러 상황 증거로 볼 때 몇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작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 濟州 牛島의 敎育

까지 6년간 사립연평보통학교에 재학<sup>5)</sup>한 것이 확실하다면 연평국민학교의 개교 연대는 1917년이라는 말이 된다. 또한 고태주에 앞서 구학문을 배운 3회 선배가 있었다는 말을 참고해 볼 때 따라서 영명의숙의 설립 연대는 1914년이 될 것이다.<sup>6)</sup>

또한 영명의숙이 일종의 개량서당임을 감안해 볼 때 개량서당의 전 단계인 전통서당의 존재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전통서당 유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 명칭은 밝혀낼 수 없었지만 그 존재여부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우도에서도 일찍부터 초등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우도의 근대교육이라는 것이 그 근본에 있어서는 전통교육과 연계되어 민족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내의 여타의 학교들이 해방정국의 복잡한 이데올로기 각축에 몸살을 앓았던<sup>7)</sup> 대신 연평국민학교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우도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1930년대 이래 사회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이 없으며<sup>8)</sup> 다른 무엇보다 본도와 격리된 우도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된다.

대신에 1945년 이후 우도의 교육적 열의나 진전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1954년에 개교한 연평중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우도의 경우도 주지하

5) 수업연한이 6년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시 공립보통학교는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4년제였으며 사립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엄격하지 않았다.

6) 현재 연평국민학교의 공식 기록에는 개교 연대가 1936년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졸업회수가 보고되고 있고 영명의숙의 설립연대는 1929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문건에는 영명의숙의 설립연대는 1918년으로 기록되고 있고 연평국민학교의 개교 연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 설정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7) 양진건, 앞의 책, pp. 323~326.

8)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일반론적 오류의 가능성이 다분한 견해이긴 하지만 면담자들 가운데 몇몇 나이 많은 분들에게서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차후의 조사가 좀더 필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시피 일찍부터 초등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그 옆의 또한 다른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지만 중등교육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민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문제가말로 당시로서는 지난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해방이 되면서 우도는 해마다 80여명의 국민학교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9년에 연평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다소나마 중등교육에 대한 바람을 만족시켜보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고등공민학교란 공민학교의 補修科를 토대로 발전시킨 것으로 1949년의 교육법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즉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초등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일종의 중학교에 준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등공민학교는 특별학제의 일환으로 공민적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관이었으며 형식적인 의미의 학교교육기관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교육 기관으로서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 우도의 주민들은 진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도의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고태주 등이 중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함으로써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중학교 설립기성회의 회장은 金應錫이었지만 그의 親日 전력 때문에 우도민들은 그에게 호의적이질 못했으며 나아가 그가 회장에 올랐던 것도 주민들의 의사에 기반한 것이 못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불만은 매우 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在日연평리 향민들도 그를 불신하여 끝내는 일본에서 모금한 중학교 설립자금을 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sup>9)</sup>

원래 우도의 중학교 설립은 고향이든, 타향이든, 혹은 이국이든 우도출신 모두의 숙원이었기에 일단 기성회가 발족되자 그에 대한 성원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중학교의 부지가 고향에서 마련된다면 설립자금은 재일연평리 향민들이 책임지겠다는 주민들 간의 약속 아래 중학교 설립을 위한 행보로

9) 김용석의 기성회장 추대는 정확히 어떤 경로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우도 주재 경찰의 영향이 컸던 것 같으며 따라서 우도 주민들은 불만을 노골화시킬 수 없었던 대신에 재일 연평리 교포라는 간접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 불만을 표출시켰다.

## 濟州 牛島의 敎育

내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등교육에 대한 기대는 그것이 교육의 기회균 등에 입각한 단선형 학제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상승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반영된 기능주의적 교육사 전개과정의 한 단면을 목격하게 된다.

당시는 아직 韓·日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우도출신 金聲五가 부산에서 선장을 하던 관계로 그를 중간 연락책으로 하여 학교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성오는 일제말기 잠녀항쟁을 조종한 혐의로 검속되어 3년 6개월 동안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였던 우도 출신의 지사로서 일본의 향민들에게나 고향사람들에게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간연락책으로서는 적격이었다.

고향에서의 학교부지 마련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수월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태주, 김필환, 강용전 등이 부지확보를 위해 마을 지주들의 후원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결국 토지를 무상희사받게 되었다. 학교부지를 위한 토지 무상희사는 마을의 학교설립을 모토로 하는 교육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주도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토지 무상희사를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후일 기부채납이 되면서 국가관리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 무렵 일본에서도 중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자금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기성회장인 김용석이 자금 관리를 책임지는 게 원칙이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재일연평리 향민들은 그의 전력을 문제 삼아 기성회장을 불신하였던 것이다. 재일향민들은 대신에 高元河나 고태주로 하여금 수금 책임을 맡기를 원하였지만 그들도 이 일로 인해 주민들 간에 반목이 생길 우려를 염려하여 그 책임을 수락할 수가 없었다.

결국 중간연락책이었던 김성오가 그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김성오는 재일향민들에게 학교 설립자금을 받은 뒤 부산에서 학교 신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구입된 재료들을 신인홍 등이 소위 통통선을 이용하여 우도로 운반함으로써 연평중학교 설립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학교의 설계는 공병대 출신이었던 강용전이 담당함으로써 제반 계획이 성안되었으며 이 외에도 그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설립에 진력

하였다.

그런데 학교 설립자금은 비단 재일향민들만 후원한 것은 아니어서 고태주나 김성오는 자금 마련을 위해 각 지역의 고향출신 인사들과 접촉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부산에서 한천사업을 하던 김하석을 만나 고향의 교육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하자 일정액의 성금 회사를 구두로 약속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금은 보내주지 않아 학교설립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이렇게 부지가 마련되고 기자재나 자금이 마련되어 학교설립이 본격화됨으로써 주민들도 공동부조 차원에서 출력을 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자들이 담당하였지만 자재를 등짐으로 운반하는 일, 석축을 쌓기 위해 등짐으로 돌을 운반하는 일, 울타리를 만드는 일, 운동장을 고르는 일 등은 모두가 주민들 몫이었다.

우도의 8개동 단위로 일정하게 책임량을 할당하여 자발적인 衆力을 유도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자발적인 주민 출력은 제주도의 재반 학교설립 운동에서 볼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교육전통으로서 현재 제주도의 역사가 오랜 학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연평중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실 교육시설이라는 물질적인 관점을 척도로 할 때 이같은 학교설립의 형편은 대단히 빈곤한 것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교육의 가치나 참여자들의 의식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은 이제 마을사람들의 손으로 완성되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 교육원리의 역사적 전환이 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학교설립이 성사될 무렵 재일연평리 출신 鄭贊治 등이 이른바 연평중학교 증축기성회를 조직하여 또다시 성금 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재일동포들이 고향의 학교설립을 후원했던 예는 제주도의 경우 비교적 많은데 백척간두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고향의 교육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제주도 교육의 역사에서 참으로 가치있는 전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도의 경우는 설립기성회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었고 이어 증축기성회를 조직 또다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는 당시 사정으로 자격교사 충원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과목들은 무자격이긴 하지만 우도 출신 가운데 유사한 교과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 濟州 牛島의 敎育

들을 적극 유치하여 고향의 교육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미군부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어교사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인데 이를 계기로 그들도 정식으로 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 3

연평국민학교는 1962년 3월 6개학년에 12학급을 인가받게 되는데 이러한 12학급 체제는 1988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만 26년에 이르도록 연평국민학교의 규모는 12학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70년대만 하더라도 연평국민학교의 재학생 평균수는 600여명이었으나 80년대 초반에는 500여명으로 하락하고 80년대 중반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하락 88년에 이르기까지는 300여명을 유지하는 실정이었지만 12학급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결국 89년부터는 11학급으로 1개 학급이 감축되었고 90년에는 9학급, 91년에는 재학생수 200여명에 7학급 규모로 하락되었다.<sup>10)</sup>

따라서 연평국민학교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는 7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재학생 평균수가 600여 명에 남녀 학생의 비율이 1:1 수준이었으며 교사 수는 평균 13명이었다. 제 2의 개발의 연대라고 일컬어지는 70년대는 국가적으로 초등교육의 개선이 국가발전과의 관련성 속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었으며 특히 義務敎育施設擴充特別會計의 운영에 힘입어 초등의무교육의 운영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던 시기였다.

70년대 연평국민학교의 분위기도 시대적 조류에 힘입은 바가 컸다. 재학생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자 71년 9월에 스라브로 2개 교실을 증축한 데 이어 72년 10월에는 스라브 3개 교실을 증축하고 또한 번소와 창고를 증축하였다. 연이어 73년 6월에도 스라브 2개 교실을 증축하였는데<sup>11)</sup> 이렇게 3년 연속적으로 교실 증축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주도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예였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1967년에 제정된 島嶼僻地敎育

10) 제주도교육청, 「통계연보」, 참조.

11) 제주도교육청, 「통계연보」, 참조.

振興法(법률 제1870호)과도 관련이 깊다. 동법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종의 적극적 等差政策으로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들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책의 표현이었다. 교육시설, 교재교구, 교과서의 무상공급, 교원사택, 교원 인사면의 특혜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펴으로써 이들 낙후지역의 의무교육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학교운영 재원 문제도 관심거리였는데 1970년 2월 문교부는 학교 육성회 운영 지침 및 준칙을 발표하고 해방 이후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의 형태로 존속해오던 것을 육성회로 제도화시켰다.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의거하여 72년부터 연차적으로 육성회비의 국고부담을 추진하였는데 육성회의 재원은 주로 학교 육성을 위한 큰 재원이 되었다.

그런데 우도의 경우는 학부형 개인의 회비수입에 의존하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학교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설립되어 운영비를 각 호당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후일 학부형회로 전환되어 같은 일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도의 경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해안 공동어장의 일정한 지역을 소위 "기성회 바당"이라고 이름하여 공동노력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그 지역을 관리함으로써 학교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성회 바당"은 1979년에 서울 등 6대 도시를 제외하고 국민학교에서의 육성회비가 폐지되기에 이르기까지 10여년 간이나 운영되었고 학교운영회 자금모금이 금지된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결과된 재원으로 공금을 마련 부락공동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이것은 성산읍 온평리가 학교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안가 일정 지역을 "학교 바당"이라고 명명하여 운영하였던 예<sup>12)</sup>와도 비슷하다.

그런데 온평리의 "학교 바당"은 그 역사가 해방직후부터 오래되었지만 우

12) 양진건, 앞의 책, p. 304.



濟州 牛島의 敎育

도의 그것은 기성회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운영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성회는 종래의 사친회가 전환된 것으로 부족시설 확충과 학교운영비 지원에 큰 기여를 하였고 1970년 육성회의 발족으로 폐지되었던 것인데 우도의 기성회 바당이라는 용어는 70년 이후에도 명칭의 변경없이 통용되어 왔다. 당시의 중등교육비의 70%가 사부담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성회 바당이 우도 교육재정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도 주민들의 열정은 연평국민학교의 '운동회' 행사에서도 나타난다. 당시의 운동회는 국민학교의 행사라기보다는 농한기를 빌어 펼쳐지는 우도 주민 전체의 연례 잔치였다. 더욱이 격리된 지역적 여건 때문에 달리 주민 전체가 어우러질 場이 없는 상황에서 운동회에 대한 주민 참여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도 주민들은 학교 일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금을 모아 학교운영비로 기탁하기도 하였다.

대개의 경우 운동회는 연례행사로써 일정한 날이 지정되었지만 이를테면 교실을 증축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된 경우도 있어서 마을의 교육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집단적인 후원과 연대 속에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웅변하는 예가 되기도 했다. 이는 교육사의 전통에서 볼 때 자신의 손으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려는 獨立學校의 정신의 반영이기도 하다.

70년대 연평국민학교의 졸업생 수는 한해 평균 90명에서 100여 명 수준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상급학교 진학자는 70년대 초반 하더라도 평균 60% 수준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79년의 경우에는 무려 98% 수준에 이르게 된다.<sup>13)</sup>

13) 이러한 추세를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학급수	학생수(계/여)	졸업자(계/여)	진학자(계/여)	진학평균
70	12	625/320	94/39	62/22	65 %
71	12	638/330	83/37	53/16	64 %
72	12	626/313	100/58	70/32	70 %
73	12	624/317	109/51	84/33	77 %
74	12	601/304	103/51	83/33	81 %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자가 확대된 것은 1968년에 결정 공포되어 197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中學校無試驗進學政策과 무관하지 않는데 중학교무시험정책은 일단 중학교 교육의 기회확대와 보편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학교의 팽창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와 불가피 연관되기 마련인데 이같은 중등교육의 연계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우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된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국민학교는 여타의 제주도 읍, 면의 학교 사정과 마찬가지로 규모면에서는 점차 그 활기를 잃게 된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되어 81년부터는 도서벽지진흥법에 의거하여 시범급식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또한 같은 해에는 병설유치원이 설립 인가되어 3월에 개원을 하게 된다. 84년에 2층 2개 교실 및 계단실을 증축하게 되고 85년부터는 특수학급 1개를 설치하게 되고 학교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세식 변소 또한 이때 신축하게 된다.

80년대 들어서도 계속된 시설사업으로 교실수는 늘어난 대신 재학생수는 70년대에 비해 100여 명이나 감소함으로써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70년대는 약 50여 명이었으나 80년대 초반은 40여 명, 후반에는 25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도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移村向鄆의 경향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실례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89년에는 드디어 종전의 12학급 체제에서 11학급 체제로 1학급을 줄이게 되고 90년에는 9학급, 91학년에는 7학급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결국 1개 학년당 1학급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는 말인데 93년의 경우 특수학급 1개를 포함 7개 학급으로 재학생수는 190여 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5명 꼴이 된다. 이러한 추세는 연평국민학교의

75	12	619/312	93/42	81/33	87 %
76	12	616/308	103/58	89/45	87 %
77	12	634/326	96/50	86/42	89 %
78	12	628/326	92/49	82/41	89 %
79	12	604/324	107/54	105/51	98 %

(「제주교육통계연보」 참조)

## 濟州 牛島의 敎育

분교장 전략을 예감케 한다.

재미있는 것은 제주도 전체의 국민학교 학생수가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된 시점이 1983년으로 우도의 경우도 83년까지는 500명 수준이던 재학생수가 84년부터 400명 수준으로 감소를 보임에 따라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학생수의 감소 문제는 우도의 경우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후부터 제기될 문제는 교육의 규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80년대 들어 급격히 부상하게 된 것이 이른바 유아교육 문제이다. 80년대 들어 고조되기 시작한 유아교육 정책에 힘입어 연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도 개원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재원생수가 80년대는 30명에서 40여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는 20여 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접적으로는 산악제한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무래도 移村向都의 추세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 4

1954년 5월 22일에 3학급 체제로 설립인가를 받고 동년 6월 20일에 개교를 한 연평중학교는 그 신장세가 급격하진 않았지만 꾸준한 편이었는데 1972년도까지는 3학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재학생수가 200여 명을 상회하기 시작한 73년도부터는 4학급 체제로 74년에는 5학급, 76년에 6학급 체제로 학칙변경을 통해 규모있는 발전을 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6학급 체제는 1990년도까지 계속되다 91년도부터는 다시 5학급 그리고 92년에 4학급, 93년에 3학급 규모로 줄어들게 되었고 재학생수도 100여 명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시설확충은 1958년에 2개 교실을 증축한 것으로 그치다가 재학생수가 300여 명을 상회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던 1983년을 기점으로 84년 12월에 무려 6개 교실을 신축하게 된다. 83년, 84년, 85년은 연평중학교의 재학생수

가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로서 84년의 교실 신축을 통해서도 적절한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86년에 1개 교실을 증축하는 등 학생수의 증가에 발맞추어 시설 확충이 서둘러져 왔다.<sup>14)</sup> 이는 연평국민학교의 재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70년대였음을 감안해 볼 때 인구파고의 당연한 반영이었다.

70년대 연평중학교의 한 해 졸업생수는 평균 65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대개 4:1 수준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약 50% 정도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였다. 상급학교의 진학자는 대부분이 남학생으로 여학생의 평균진학률은 여자 졸업자의 20%도 채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도의 경우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에 존재했던 관계로 취학을 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고등학교 진학의 경우는 그 문제 해결이 그리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중학교 졸업자의 1/2 수준이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는 형편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정도가 매우 심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학교에서 1:1 수준이었던 남녀 비율이 중학교에서 4:1 수준으로 성비차가 심해진 이유나 중학교 재학 여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저조한 이유 등은 달리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수의 여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의 진학보다는 “물질”로서의 현실적인 길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도 경제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역할의 막중함을 대변하는 실례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서 상급학교 진학 대상의 여학생들이 지역적 사정으로 일단 진학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폐쇄적 형편은 1979년부터 두드러지게 완화되는데 79년의 경우를 참고해 보면 6학급 체제로 재학생수는 262명(여학생 128명)이었으며 졸업생 89명(여학생 48명) 가운데 상급학교 진학자는 76명(여학생 37명)으로 진학률이 평균 85%를 상회하고 특히 여학생의 그것은 77%에 입각하였다. 이것은 전년대비 평균 25% 정도의 신장세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무려 55% 정도의 급격

14) 제주도교육청, 「통계연보」, 참조.

濟州 牛島의 敎育

한 신장세를 반영하는 것이다.<sup>15)</sup>

여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의 급격한 신장세는 소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산업체부설학교의 진학에 따른 결과인데 특히 우도의 경우는 일찍이 부산과 관련이 깊었고 부산지역에 많은 우도 주민들이 터전을 잡고 있었던 관계로 이 지역의 산업체부설학교에 많은 학생들의 진학이 더욱 용이했다.

정부는 1976년 말에 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업체에 중고등학교를 부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77년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체에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부설 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1979년에는 1,108개의 산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여 40,000여 명의 근로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인데 이러한 실업교육의 추세에 많은 우도 출신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과거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우도의 여학생들의 경우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물질을 선택했던 것인데 이제 산업체부설학교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적 욕구도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년 대비 55%를 상회하는 여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우도의 독특한 사정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학교교육 기회를 보상해 준다는 정부의 시혜적 차원에서 실시된 산업체부설학교는 교육과정과 내용이 근로청소년의 실제와는 동떨어져 있거나 회사에서 취학을 미끼로 근로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 등의 문제점도 많았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산업체부

15) 이 추세를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학급수	학생수(계/여)	졸업자(계/여)	진학자(계/여)	진학평균(남/녀)
73	4	226/90	51/19	25/5	49/26 %
74	5	238/98	60/19	19/3	31/15 %
75	6	241/96	70/32	34/7	48/21 %
76	6	239/103	83/35	34/4	40/11 %
77	6	255/123	69/22	42/7	60/31 %
78	6	257/130	74/32	42/6	56/18 %
79	6	262/128	89/48	76/37	85/77 %

(「제주교육통계연보」 참조)

실학교는 일단 우도의 여학생들에게는 교육적 폐쇄회로를 열어주는 장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상급학교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 당했던 우도의 여학생들에게도 그 문호가 개방되게 되었다.

도내의 상급학교는 대개 남학생들이 진학했으며 많은 수가 가까운 성산수산 고등학교에 적을 두었다. 성산수고에서는 우도 출신의 학생들을 위해 납입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대신 우뭇가사리나 톳 등이 채취되어 마을 주민들이 목돈을 만지게 될 무렵 납입금을 해결하게 하는 나뭇대로의 원칙을 주민들과 합의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예를 들자면 대정 지역이 감자 수확에 따른 판매 시기를 통해 납입금 문제를 해결<sup>16)</sup>하였던 것과도 유사한데 이 모든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당대의 삶과 무관할 수 없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상급학교의 진학에 따른 우도 주민들의 교육적 부담은 매우 컸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앞서서도 보았듯이 상급학교 진학률이, 특히 여학생의 그것이 저조했던 것이고 따라서 우도 주민들은 그러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산업체부설학교와 같은 기회를 적극 이용하고자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급학교 재학 때문에 제주시내 등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클 수밖에 없었다.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 인문계 보다 실업계를 많이 지원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도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득원으로는 풍부한 해산물로써 여러 해산물들 가운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뭇가사리는 특히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우뭇가사리 철에는 손이 아쉽기 때문에 자연 집안 식구 모두가 동원되기 마련인데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를 조퇴하는 게 상례였다. 그렇다고 학생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우뭇가사리가 풍부한 지역의 학생들은 조퇴를 하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형편이라 정상적인 수업운영이 문제되었다. 이같은 조퇴 문제는 최근까지도 논란되던 문제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참여구조에 관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사안이다.

16) 대정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

## 濟州 牛島의 敎育

학교는 공부할 과제의 구조(academic task structure)와 함께 사회적 참여구조(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가 동시에 논의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전자의 구조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파행성은 우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뚝가사리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참여구조 요인에 대해 학교가 배타적이 됨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오히려 “감자방학”이나 “벌초방학” 등의 방법으로 교육의 의사소통 참여구조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연하게 화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왜 우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보다는 강경한 교육전략을 고수했는지 의문이다.”<sup>17)</sup>

우도 밖에서 상급학교를 다니던 여학생들도 우뚝가사리 철에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채취 작업을 도왔는데 토요일 방과후에 귀향하여 일요일까지 작업을 한 뒤 월요일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빌린 배를 이용하여 다시 등교를 하던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산물 채취가 우도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실감케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해산물을 원천으로 하여 교육비를 부담하기는 우도 전체가 겪는 형편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물질”이 자연 큰 몫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질은 우도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다도해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출가도 장기적일 수 밖에 없었다. 제주도 여성들의 끈기나 강인함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도의 여성들은 바다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처지에서 더욱 억척스러웠던 것이고 그러한 억척스러움의 결과로 우도의 교육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연평중학교가 그런대로 안정되었던 시기는 80년대였다. 80년대는 재학생수도 안정되게 유지되어 학급당 인원수도 1개 학년 2개 학급규모로 평균 40명 수준이었다. 80년도 우리나라 중학교의 학급당 수요인원이 평균 66명이었고 정부에서는 87년에 57명 수준으로 감축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연평중학교의 학급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

17) 우선 그것이 제주도 전역의 문제도, 우도 전역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며 해당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사실 일부 면담자는 이러한 얘기를 함)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이유가 못된다. 따라서 이것은 단위학교 교육지도성 유무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안정세는 급격히 와해되면서 재학생수도 격감하고 그에 따라 학급수도 종내는 1개 학년에 1학급 40명 규모로 감소된다. 이것은 移村向都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러한 추세는 우려할 만큼의 가속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

## 5

우도의 교육전통은 제주도의 울곧고 내용찬 교육전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만큼 우도의 교육은 그 전통이 역사적으로 풍부하다는 말이다. 그것은 우도에 사람들이 발을 디딘 시기부터 그 험난했던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도의 교육은 역사만들기(Geschichte machen)라는 명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말이 된다. 특히 학교설립을 둘러싸고 웅변한 우도 주민들의 공동체적 강고성은 제주교육 전통의 귀감이며 제주교육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증거이기도 하다.

우도 교육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또 달리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한국교육의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교육의 급증은 당연히 교원부족, 시설불량, 교육내용 부실 등의 문제를 안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우도에서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팽창도 급격하였지만 쇠락 또한 마찬가지로 여서 교육의 안정성이나 적절성은 우도 교육의 역사를 설명하는 적절한 변수가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교육 모순의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移村向都라는 후기산업사회의 대세는 우도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도 교육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 그 모든 시간대를 한꺼번에 쇠락케 한다는 데 치명적이다. 분교 또는 폐교로 진행되는 학교규모의 회실에 따른 거정보다는 그동안 우도가 역사적으로 견지했던 교육전통의 상실이야말로 가장 심대한 도전인 것이다.